

#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CHECK POINT

2017. 3. 24.

# 오늘은 이 내용으로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의 연혁 및 주요 개념
-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 개인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의 유출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개인정보 보호법의 연혁 및 주요 개념

- 개인정보 보호법의 연혁
-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념

# 개인정보 보호법의 연혁

## 2011. 3. 29. 제정(법률 제10465호)

[주요 내용]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한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의 규정
-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 강화를 통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 및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의 보호
- 2011. 9. 30.부터 시행. 다만, 인터넷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제공 및 미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부와 조항은 2012. 3. 30.부터 시행

## 2013. 8. 6. 개정(법률 제11990호)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규정(제24조의2)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와 규정(제75조제2항제5호)의 신설
- 주민등록번호의 분실·도난 등에 대한 5억원 이하의 과징금부와 규정(제34조의2)의 신설
- 과징금부과시 과태료부와 금지 규정(제76조)의 신설
- 2014. 8. 7. 부터 시행

## 2014. 3. 24. 개정(법률 제12504호)

[주요내용]

- 법의 목적을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로 구체화(제1조)

- “처리”의 개념에 “연계, 연동” 추가(제2조제2호)
-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예시된 법률 삭제(제6조)
- 주민등록번호의 안전한 보관,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의 대통령령 위임(제24조의2제2항)
- 법률 제11990호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규정(제24조의2)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제75조제2항제5호)을 2016. 1. 1.부터 시행하기로 유보

## 2015. 7. 24. 개정(법률 제13423호)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 강화 -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점검권, 자료제출요구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 위촉권 부여(제8조제4항·제5항, 제8조의2, 제11조제1항, 제40조제3항·제4항 및 제63조제4)
-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 규정(제39조제3항·제4항 및 제39조의2)의 신설
- 개인정보 보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제32조의2)의 신설
-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 및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규정(제70조 각 호 및 제74조의2)의 신설
- 제8조제1항, 제8조의2, 제9조, 제11조제1항, 제32조의2, 제39조제3항·제4항, 제39조의2, 제40조, 제75조제2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 7. 25.부터 시행
- 법률 제12504호에 의하여 개정된 제24조의2제2항 전단(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조치) 및 제75조제2항제4호의3(과태료)의 개정규정은 2016.1.1.부터 시행

## 2016. 3. 29. 개정(법률 제14107호)

[주요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처리 목적 등 고지의무 규정(제20조제2항-제4항)의 신설
-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무 규정(제23조제2항)의 신설

## [주요내용]

- 행정자치부장관에 의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안전성확보조치 의무 이행의 정기적 조사권 규정(제24조제4항·제5항)의 신설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한정(제24조의2제1항제1호)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연락처와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제30조제1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국회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제정·개정 현황 보고의무 규정(제67조제2항제5호)의 신설
-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6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 3. 30.부터 시행
- 제30조제1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개정은 2016. 9. 29.까지 할 것.

###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9장 79개조, 부칙으로 구성됨.

- 제1장 총 칙 (제1조-제6조)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7조-제14조)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5조-제28조)
-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29조-제34조의2)
-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5조-제39조의2)
-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40조-제50조)
-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51조-제57조)
- 제8장 보 칙 (제58조-제69조)
- 제9장 벌 칙 (제70조-제76조)

#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념

용 어	정 의
처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li> </ul>
정보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li> <li>✓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 없이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정보주체가 되며, 소비자, 근로자, 환자, 학생, 교사, 군인, 공무원, 피의자, 죄수, 행정조치 대상자 등도 정보주체가 됨.</li> </ul>
개인정보 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 집합물</li> </ul>
개인정보 처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li> <li>✓ "업무"란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수 유무나 영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 1회의 행위라도 계속·반복의 의사가 있다면 업무로 이해하여야 함.</li> </ul>

용 어	정 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정하는 사람</li> </ul>
개인정보 취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b>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b>으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사람</li> </ul>
영상정보 처리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장치</li> <li>✓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네트워크 카메라</li> </ul>
개인영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b>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b>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li> </ul>
민감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li> <l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li> </ul>
고유식별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b>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b>를 말함.</li> </ul>



## 용 어

## 정 의

공개된  
장소

-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

## 참고사항

-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가운데 ①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②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③ 선고유예의 실효, ④ 집행유예의 취소, ⑤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범위

##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 일부 규정의 적용 제외

- ① 개인정보 수집 · 이용(제15조)
- ②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 공개(제30조)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제31조)

- ①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제15조)
- ② 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
- ③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제한(제27조)
- ④ 개인정보 유출통지(제34조)
- ⑤ 개인정보처리정지요구(제37조)

## 포괄적 규정 (제3장-제7장) 의 적용 제외

- ①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
- ②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 ③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 ④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 · 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 · 이용하는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호 추진 체계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예시)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12

## ■ 공공기관

### 지정요건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마. 시·도 및 시·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바. 시·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사.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정보처리자

-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업 무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 권 한

1. 개인정보처리현황, 처리체계 등 수시 조사 또는 보고 청취권
  2.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 조사 및 개선을 위한 자료제출, 조사협조 등 요구권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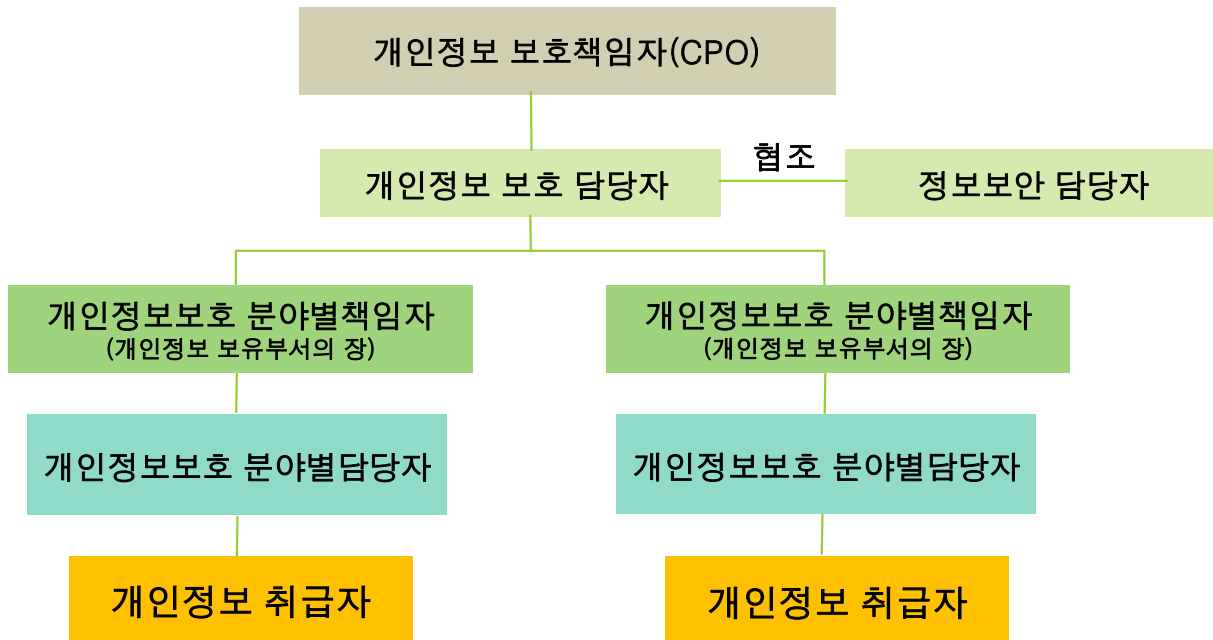
### [공개사항]

## 공 개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
- ✓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 추진 체계(예시)

14



# 개인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 개인정보의 파기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 동의를 받는 방법

# 개인정보란?

##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 사망자의 개인정보 가운데 유족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정보를 포함.
- 법인/단체/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주소,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가 아님.
- 각각의 상황에 따라 판단 가능(예:임원/직원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사진등)

##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판단함.
- 정보의 종류, 형태 등의 제한이 없고, 정보주체와 관련 있는 경우 ‘객관적 사실’ (예 : 나이, 키, 몸무게, 주소, 전화번호, 학력 등)은 물론 ‘주관적 평가’ (예 : 직무능력평가, 인사평가, 직무태도 등)도 포함.
- 사실은 물론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확한 정보도 특정 개인과 관련성 있으면 개인정보임.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쉽게 결합하여’ = ‘입수가능성’ + ‘결합가능성’
- ‘입수가능성’이란 2종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기 위한 해당 정보에 대한 합법적 접근·이용을 말함.
- ‘결합가능성’이란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비용이나 노력이 비합리적으로 수반되지 않아야 함을 말함.

### 개인정보 보호란?

- ①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 ②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내부자의 고의나 관리부주의 또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 ③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련의 행위·조치

## < 개인정보 (예시) >

유형구분	개인정보항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그 밖의 수익정보	보험 (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고용정보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성격 테스트결과 직무태도
법적 정보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 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Log file), 쿠키(Cookies)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 개인정보



- 주식회사○○○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수집하는 영상에서 굴착공사 화면이 나올 경우 굴착공사 장소에 관한 정보를 ‘굴착공사가 ○○동 ○○ 지점에서 진행 중’ 이라는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 요청하는 경우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 서울시가 주식회사 ○○○에 제공하는 정보는 특정장소, 즉, 굴착장소에 관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은 해당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서울시로부터 해당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함.

## 수집·이용 요건

- ① 정보주체의 동의
- ② 법률 특별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
- ③ 법령 등이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 (공공기관에 한함.)
- ④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 ⑤ 정보주체 /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 ✓ 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고,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려야 함.
- ⑥ 정보주체 권리보다 우선하는 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의 달성
- ✓ ②-⑥의 사유에 따른 수집의 경우 수집의 법적 근거 등을 정보주체에 알리기 위한 노력 필요.

## 고지의무

- "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는 경우에 한함.
- ①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④ 동의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 고지의무

### ⑤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부동의 가능 사실

#### 필요한 최소한 수집 확인

-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 ✓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
- 수집 목적의 범위 내 이용
-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부동의를 이유로 한 재화/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 매체 등 이용 개인정보수집· 이용

- 명함 등 매체 이용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 명함 등을 제공받은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 이용 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하거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 이용 가능

#### 대리인의 개인 정보 수집·이용

- 대리인을 통한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의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

#### 근로자와 사용 자의 관계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능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주식회사○○○은 고객정보의 수집·관리, 시장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고객센터 스펙가 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운영 업무를 내부 부서별로 분장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객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기관 자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 기관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망 운영부서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에서 상품의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상품에 대한 기호도 분석 및 시장동향에 대한 연구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설문 조사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운영부서로부터 설문조사 대상자의 성명,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별, 집주소, 이메일주소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은 고객정보의 수집·관리, 시장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고객센터 스펙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주식회사○○○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운영을 하고 있는 내부 부서는 주식회사○○○의 업무를 분장하는 하부조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품의 연구·개발부서가 정보통신망 운영 업무 부서로부터 개인정보를 받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하부조직 간 개인정보의 제공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이 상품에 대한 기호도 분석 및 시장동향에 대한 연구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대상자의 성명,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별, 집주소, 이메일주소를 이용하는 것은, 수집 당시에 이러한 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설문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별도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 알려야 하고,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2.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상품에 대한 기호도 분석 및 시장동향에 대한 연구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 업체에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거나 확인할 것.
- ② 반드시 표준계약을 활용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 ③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 ④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할 것.
- ⑤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처리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업무위탁 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계약시 필요적 기재사항>

-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4.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5.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6.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7.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 ✓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하며 개인정보처리수탁자는 제외함.

(수집목적 내)  
제공 요건

- ① 정보주체의 동의
  - ② 법률 특별 규정/법령상 의무 준수
  - ③ 법령 등이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 (공공기관에 한함.)
  - ④ 정보주체 /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 ※ ②-④는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

## 고지의무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⑤ 동의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무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은 금지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제공



- **고객의 개인정보를 그룹 내 계열사가 서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모든 계열사를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합니까? 혹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그룹 내 계열사 모두’ 로 기재해도 됩니까?**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구체적으로 정보주체인 해당 고객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명칭 및 연락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 다만, 제공받는 자가 많아서 동의서에 모두 기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의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별도의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정보주체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동의서에 별도의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구체적 목록이 기재되어 있고, 고객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동의서에 ‘그룹 내 계열사 모두’ 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28

## 목적 외 이용·제공 요건

- 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 ③ 정보주체 /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 ✓ 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고,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려야 함.
- ④ 통계작성/학술연구 등 목적을 위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 제공
- ⑤ 다른 법률의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 ⑥ 조약, 국제협정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⑦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 ⑨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
- ※ ⑤-⑨는 공공기관에 한정
- ✓ 정보주체 /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

## 고지의무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 ②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제공시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③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시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⑤ 동의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함.

### 제공받는 자에 대한 요청사항

-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문서로 다음의 사항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 ①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한
  - ②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마련
- ✓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 책임관계의 명확화

-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게재의무 (공공기관)

- 공공기관이 요건 ②-⑥, ⑧, ⑨에 따라 목적 외 이용·제공을 한 경우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
-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함.

## 게재의무 (공공기관)

### ✓ 게재사항

①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②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③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④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 제공받은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 ✓ 요청을 받은 자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은 금지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관리대장의 작성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한 경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 필수항목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이용목적 등을 제한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 주식회사○○○은 사옥 신축 및 식자재 납품 관련 계약 등 업무에 대한 불법행위를 내부감사하고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감사결과에 따라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 내부 전산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임직원의 이메일 송수신기록과 이메일 내용 및 첨부물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내부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부감사를 한 결과 범죄혐의를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 감사에 이용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까?



- 전화 및 이메일 송수신기록은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송수신기록의 수집·저장은 통신요금정산, 이메일 송수신 서비스 제공, 전산시스템 보안 등을 그 목적인다고 할 수 있는데, 주식회사○○○이 송수신기록을 내부감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러한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할 수 있는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상법 제412조에 따르면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고,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또는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감사를 위하여 관계 서류, 장부 및 물품의 제출 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임직원의 이메일 송수신기록은 내부감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한다면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부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메일 송수신기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주식회사○○○의 내부 전산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임직원의 이메일 내용 및 첨부물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통해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비밀장치한 전자기록등’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 이외의 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주체인 해당 임직원의 동의 없이 이메일 송수신 기록을 내부감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형법」 제316조 제2항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6조제2항 -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식회사○○○이 범죄 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고, 그 열람범위를 범죄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이메일 내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내부감사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참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주식회사○○○이 감사에 이용한 개인정보를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식회사○○○ 이 감사에 이용한 개인정보 가운데 이메일 내용을 제외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그리고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은 특정인의 범죄사실 등 고소 또는 고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주식회사○○○ 이 내부감사를 한 결과 범죄혐의를 발견하여 「형사소송법」 제223조 또는 제234조에 따라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목적 외 제공이 허용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 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한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다른 법률의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 간의 일반법과 특별법과의 관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전적인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사안별로 체적·개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주식회사○○○ 이 내부감사를 한 결과 범죄혐의를 발견하여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가운데 이메일내용을 제외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 송파구청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하여 우리 회사가 건물 뒷편에 설치한 영상 정보처리기로 촬영한 쓰레기 무단투기 영상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정보를 제공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까?



-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업무’란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말함. 그러므로 개인적 활동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예: 개인이 집 앞에 CCTV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송파구청은 공공기관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폐기물의 무단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사람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제8조제1항, 제68조제3항제1호).
- 따라서 송파구청은 무단투기를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업무를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식별하여야 하므로 쓰레기 무단투기 장면이 촬영된 영상 등 쓰레기 투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廢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39조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송파구청장은 회사에 영상정보처리기기으로 촬영된 영상정보(법상 “자료”에 해당함.)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목적 외 제공이 허용되므로 회사는 송파구청의 요청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문제) 여기에서 집 앞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으로 촬영한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 이 경우 우선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청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합니다. 따라서 영상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신고를 하는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문서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

# 개인정보의 파기

## 파기요건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 파기시기

1.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

## 파기방법

- 복구 또는 재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1.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
  - ✓ 전용소자장비 이용 삭제 / 데이터 복원 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2.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는 파쇄 / 소각 (완전파괴)
- 개인정보의 일부를 파기할 때 완전파괴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파기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li> <li>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li> </ol>
파기사항의 기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 확인</li> <li>• 파기사항의 기록·관리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표준지침 별지 제5호 서식) 활용)</li> </ul>
예외적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함.</li> <li>✓ 위의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li> </ul>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파일의 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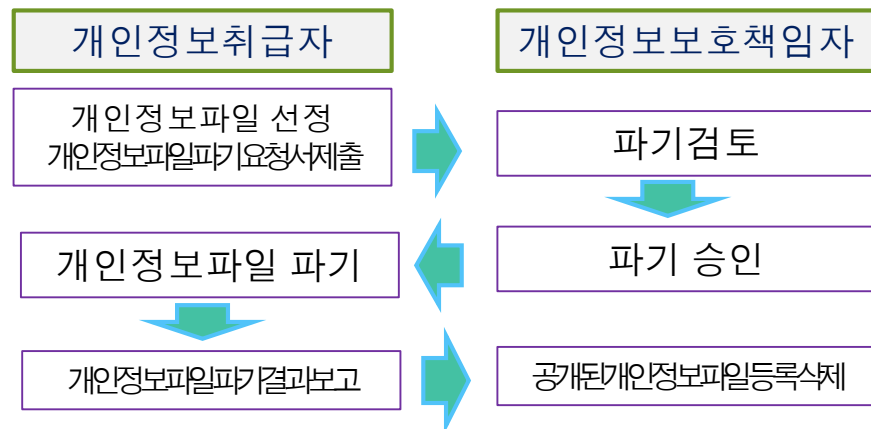
개인정보  
파기계획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 계획」의 수립·시행하여야 함.

파기사유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

파기절차



파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파기



- 1)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는 언제 파기하여야 합니까?
-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퇴직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관을 받거나 파기하여야 합니까?



- 1) 퇴사 후 3년이 지나고, 보유기간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근로자의 사용증명서 청구권 행사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한 퇴직근로자 개인정보 보존연한은 최소 3년임.
  - 다만, 경력증명 등 퇴직근로자의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해 3년 이상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보관하면 됨.
- 2) 경력증명 등을 위한 목적으로 보관·이용하고 있던 퇴직근로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기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음.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해당 퇴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퇴직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케팅을 하는 등 원래의 보유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처리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만을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다음에 따름.

## 고지의무

-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고지
  - ①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③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위의 사항을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고지하여야 함.
  - ①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②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고지 방법 / 시기

- 서면 · 전화 · 문자전송 · 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고지방법 / 절차

✓ 개인정보 제공 시 고지사항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개인정보의 보관·관리 의무

- 개인정보의 고지의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①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②알린 시기, ③알린 방법을 보관·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고지하여야 함.

## 예 외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①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②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③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④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⑤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동의를 받는 방법

## 동의 필요 여부 확인

-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을 것.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와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구분 –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 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③ 법 제22조제3항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 ④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없는 경우
  - ⑤ 민감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령에 민감정보 처리 근거가 없는 경우
- ✓ 위의 요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告知하여야 함.

## 고지 여부 확인

-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동의 거부 선택 가능 사실 고지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의 경우 수집의 법적 근거 등 고지 노력
- 전화에 의한 동의 관련 통화내용 녹취 시 녹취 사실의 고지

## 별도의 동의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법 제18조제2항제1호, 제22조제3항) 또는 선택적 동의(법 제22조제2항)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 14세 미만 아동

-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 이 경우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수집의 이유를 알려야 함.
-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 또는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의 수집· 이용

- 친목단체의 운영을 위한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 1. 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 사항
- 2. 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납부현황에 관한 사항
- 3. 친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여부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 4. 기타 친목단체의 구성원 상호 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 영업 양동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제한

-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1.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② 수집하려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③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예외적  
처리 요건

## 2.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자 -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 ②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민감정보 이용 목적
- ③ 제공하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④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법령에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대 상]** ①공공기관, ②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  
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조사주체]** 행정자치부장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행정자치부장관  
이 고시하는 법인, 단체, 기관

**[조사주기]** 2년마다 1회 이상 조사

**[조사방법]**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온라인 / 서면을 통한 자료의 제출

---

#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예외적 처리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1. 법률 ·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암호화조치의무

**[대 상]**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 조치를 통한 안전한 보관 의무가 있음.

**[암호화시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

1.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7년 1월 1일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8년 1월 1일

## 대체수단의 제공 의무

-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가입 목적으로 처리하거나 소속, 직급, 근무연수를 맞춤형복지 점수배정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제1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4호는 보험회사가 「상법」 제735조의3(단체보험)에 따른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체보험”이란 구성원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체가 보험계약자로서 피보험자인 구성원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일괄계약하는 보험을 말한다.

- 따라서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가입 목적으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인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는 것은 수집목적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수집,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인 직원소속, 직급, 근무연수를 맞춤형복지 점수배정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49

## 문서주의

-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은 문서에 의하여야 함.
- ✓ 필수항목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 「표준 개인정보처리업무위탁 계약서」 활용

## 위탁 사실의 공개의무

-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 [공개방법]

1.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

## 위탁 사실의 공개 의무

2.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 ① 위탁자의 사업장 · 영업소 · 사무소 · 점포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②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나 위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시 · 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 ③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 소식지 · 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실는 방법
  - ④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 고지의무

-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 **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재**

## 수탁자에 대한 교육, 관리 및 감독 의무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지를 감독**하여야 함.
-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처리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업무위탁 계약서의 필수항목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함.

## [수탁자 교육 내용](예시)

- ① 수탁업무의 목적·범위, 목적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사항
- ② 수탁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PC의 접근 권한의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③ 수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안전성 확보조치 방법
- ④ 수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목적 달성 또는 계약 해지시 개인정보 파기
- ⑤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 ⑥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⑦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수탁자의 의무

-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수탁자의위탁자 소속 직원 간주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봄.
- 정보주체는 수탁자로부터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재위탁 받아 처리하는 재수탁자가 재위탁 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영업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52

## 고지의무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고지사항]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고지방법]

- ①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② ①의 방법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재

## 영업양수자등의 의무

- **[고지의무]**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은 영업양수자들은 개인정보를 이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면등의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 다만, 이미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전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고지의무 면제
- **[목적 내 이용·제공의무]**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 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설치요건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의 장소에서는 그 설치·운영이 금지됨.
  1. 공개된 장소
  2.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예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등) 가운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다만,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은 금지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가운데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설치·운영이 허용됨.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2.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설치절차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 교정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안내판 설치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li> <li>• 건물 내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설치지역임을 표시하여야 함.</li> </ul>
	내용	① 설치목적 및 장소 ② 촬영범위 및 시간 ③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의 경우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기재</li> <li>•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li> </ul>

✓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국가보안시설의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의무가 면제

## 방법

-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에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을 말함(군사기지법 제2조제2호).
-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함(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
- "국가보안시설"이란 파괴, 기능 마비 또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전략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지역을 말함(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

## 안내판 설치

## 대안

- 안내판설치에 갈음한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허용사유
  - ①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 ②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인터넷홈페이지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② 관보(공공기관인 경우)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 설치·관리 등 위탁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 다만, 공공기관은 다음의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함.
  - ① 사무위탁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함.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② 안내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하여 공개할 것.
  - ③ 수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것.

### CCTV 설치 안내



- ◆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 ◆ 설치장소 :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 각층의 천장
- ◆ 촬영범위 :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층 복도(360° 회전)
-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 관리책임자 : 0000과 홍길동 (02-000-0000)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 ◆ **수탁관리자** : 0000업체 박길동 (02-000-0000)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여야 함.

### [필수항목]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수립·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1.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공공기관인 경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 소식지 · 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실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 관리책임자의 지정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관리책임자의 업무]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 ·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 · 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 주식회사○○○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로부터 회사가 CCTV로 수집한 모든 사람과 차량의 영상정보를 범죄수사목적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CCTV로 수집한 모든 사람과 차량의 영상정보를 범죄수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둘째, 위배된다면 ○○경찰서가 주식회사○○○에 수배자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주식회사○○○이 ○○경찰서에 해당 수배자 또는 수배차량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셋째,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그리고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CCTV에 차량방범 목적을 추가한 후 위 각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경찰서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사람의 얼굴과 걸음걸이 등 행태(바이오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차량의 영상정보는 차량번호, 차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경찰서에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CCTV를 통하여 촬영된 영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최소처리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경찰서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수배자 또는 수배차량의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 「경찰법」 제3조제2호).
- 그렇지만, 공공기관은 그 제공의 요구에 응하여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목적 외 제공이 허용되지만, 민간부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단서 및 제7호).

- 「개인정보 보호법」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 외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①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통계작성 등 목적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그런데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 할 수 습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제1항). 따라서 ○○ 경찰서의 장은 범죄 수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에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식회사○○○은 ○○경찰서에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 주식회사○○○이 CCTV설치 목적에 차량방범 목적을 추가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 과연 민간부문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차량방범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장소 및 주된 촬영대상 등을 고려하여 설치 목적을 추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추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리고 그 목적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목적 외 제공을 허용하는 4가지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 경찰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그리고 제공 정보에 대한 기록·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1) **교통정보 수집, 교통단속,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영상을 수집하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영상을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에 제공할 수 있는가?**
  - 2) **재난재해 또는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 확인,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 경로 분석,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목적으로 경찰서에 영상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용 회선을 통하여 상시 제공할 수 있는가?**
- 



- 1)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영상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 일뿐 영상의 상시 제공은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서 등에 영상을 상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2) 경찰서가 재난재해 또는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을 확인하거나,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 경로를 분석하는 것은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고, 범죄를 수사하거나 또는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총주시는 위와 같은 경우 경찰서에 본건 영상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용회선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 제1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2015-19-33호)



- ○○시는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목적으로 지능형교통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주택가, 공원, 학교 주변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교통영상정보와 후자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방범영상정보를 경찰서·소방서·군부대에 제공할 수 있는가?



-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확대기능이 있어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확대기능으로 조작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정보를 확대하여 개인이나 차량번호를 알아볼 수 있다면 위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재해·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 확인 목적,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경로 분석 목적의 제공은 국민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확인 목적의 제공은 국민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교통사고에 따른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아닌 경찰서나 소방서, 군부대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 조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제2015-10-17호)

#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 보관 및 파기

- 개인영상정보는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보관하되, 그 기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함.
-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함.

### [파기방법]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 파기의 기록 및 관리

### [기록·관리 항목]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 목적 외 이용·제공 의 기록 및 관리

-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 [기록·관리 항목]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3호 서식) 활용.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영상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성확보조치]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다만, '소상공인'은 예외로 할 수 있음.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설치·운영점검 (공공기관)

-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설치·운영점검  
(공공기관)

[점검시 고려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자체점검

- 공공기관 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자체점검  
결과의 공개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기준의 적용 대상 개인정보처리자 및 그 유형

구 분	1만명 미만	1만명-10만명 미만	10만명-100만명 미만	100만명 이상
공공기관	유형2(표준)		유형3(강화)	
대 기 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유형2(표준)			유형3(강화)
소상공인	유형1(완화)	유형2(표준)		
개 인				
단 체		유형2(표준)		유형3(강화)

### 유 형

### 적용대상

유형 1(완화)(80%)

-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유형 2(표준)(19.7%)

-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 1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유형 3(강화)(0.3%)

-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단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구분	내 용
기술적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li> </ul>
관리적 안전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접근권한관리</li> <li>② 접근통제</li> <li>③ 개인정보의 암호화</li> <li>④ 접속기록의 보관</li> <li>⑤ 악성프로그램의 방지</li> <li>⑥ 관리용단말기의 안전조치</li> </ol>
물리적 안전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출입통제절차</li> <li>②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 보관</li> <li>③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통제를 위한 보안대책</li> <li>④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li> <li>⑤ 개인정보 파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li> <li>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li> <li>③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li> <li>④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li> <li>⑤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li> <li>⑥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li> <li>⑦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li> <li>⑧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li> <li>⑨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li> <li>⑩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⑪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li> <li>⑫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li> <li>⑬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li> <li>⑭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li> <li>⑮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 ⑫-⑭는 유형2의 경우 제외 가능</p>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요약)

## 접근권한

- 접근권한최소화/차등부여
- 접근권한관리기록(3년)
- 개별계정발급/공유금지
- 비밀번호작성규칙 적용
- 로그인실패시 접근제한

## 접근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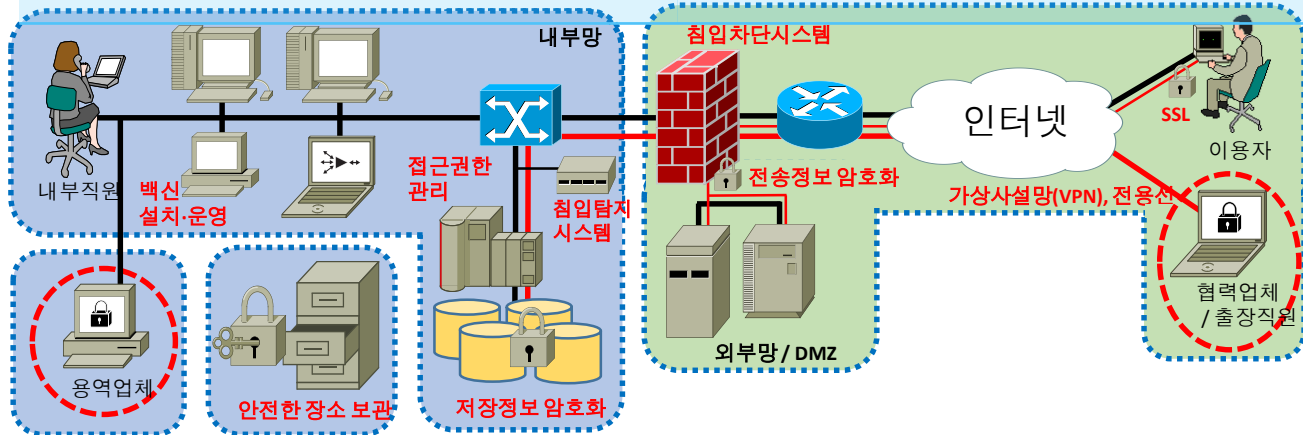
- 접근통제시스템설치.운영
- 외부접속시 안전한 접속수단/인증수단 적용 (유형1 면제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유출방지
- 고유식별정보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유형1 면제 가능)
- 자동시스템접속차단 (유형1면제가능)

## 개인정보 암호화

- 송수신/보조저장매체 전달 시 암호화(고유식별정보,비밀번호,바이오정보)
- 바이오정보, 비밀번호 암호화저장
- 업무용컴퓨터, 모바일기기에 고유식별정보 저장시 암호화
- 안전한 암호키 생성등에 관한 절차 수립 및 시행 (유형1, 2 면제 가능)

## 접속기록 보관/점검

- 접속기록의 보관(6개월 이상)
- 접속기록의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 악성프로그램방지

- 백신SW 설치 및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 응용프로그램 및 운영체제 보안업데이트
- 발견된 악성 프로그램 삭제등 대응조치

## 관리용단말기안전조치

- 비인가자의 접근 및 임의의 조작 통제
- 목적 외 사용 통제
- 악성프로그램 감염방지 등 보안조치 적용

## 물리적안전조치

- 개인정보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절차 수립·운영
- 개인정보의 안전한 장소 보관
- 개인정보 포함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보안대책의 마련

## 재해재난대비안전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 목적 위기대응절차 마련 및 정기적 점검
- 재해·재난 발생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 계획의 마련 (유형1, 2 면제 가능)

## 개인정보파기

- 완전 파괴, 전용소자장비 이용 삭제,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 개인정보 일부 파기의 경우 개인정보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등

# 개인정보의 유출

-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 개인정보 유출 실태
-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절차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의 마련
- 개인정보 유·노출 관련 공무원 징계 정도



# 개인정보 유출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그 밖에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그 밖에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 개인정보 유출 실태

발생시기	사업자명	유출규모	원 인	조치사항
2010. 3.	35개 사업자	3,300만건	홈페이지 해킹	과태료 9,700만원 (19개사) 시정명령
2011. 7.	Sk컴즈	3,500만건	홈페이지 해킹	행정처분 없음 경찰 무혐의
2011. 8.	한국엠펙손	35만건	홈페이지 해킹	과징금 3,300만원 과태료 900만원 시정명령
2011. 11.	넥슨코리아	1,320만건	백업서버해킹	과징금 771백만원 과태료 1,500만원 시정명령
2012. 5.	EBS	422만건	홈페이지해킹	과태료 1,000만원 시정명령
2012. 7.	KT	873만건	인증절차를 우회해 해킹	과징금 753백만원 시정명령
2014. 3.	KT	1,170만건	홈페이지 해킹	과징금 7천만원 과태료 1,500만원 시정명령

국민 1인당  
2.1회

과징금은  
유출정보  
1건당 16.6  
원

#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신고절차

75

단계	내 용
1	<div> <div>통지</div> <div>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주체인 정보주체에게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통지. 다만, 긴급한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그 조치를 한 후 통지 가능</div> </div>
	<div> <div>통지 항목</div> <div>①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②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③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⑤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div> </div>
	<div> <div>제재</div> <div>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에게 유출통지항목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div> </div>
2	<div> <div>긴급 조치</div> <div>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접속경로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의 시행 ( 긴급한 조치 시행 후 통지 가능)</div> </div>
	<div> <div>지원</div> <div>긴급한 조치의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기술지원 요청</div> </div>
	<div> <div>제재</div> <div>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긴급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명령</div> </div>

3	공개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출통지사항을 공개
	게재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별 통지와 함께 유출통지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
	제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지 않거나 7일 미만 게재하는 경우 시정조치명령
4	신고	1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 통지 및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a href="http://www.privacy.go.kr">www.privacy.go.kr</a> )에 신고
	제재	행정자치부 또는 전문기관에 통지 결과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의 마련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과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함.

## [매뉴얼 포함사항]

### 매뉴얼의 마련

1. 유출통지·조회 절차
  2. 영업점·인터넷 회선 확충 등 고객민원 대응조치
  3.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4. 고객불안 해소조치
  5. 피해자 구제조치
  6. 그 밖에 신속한 대응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사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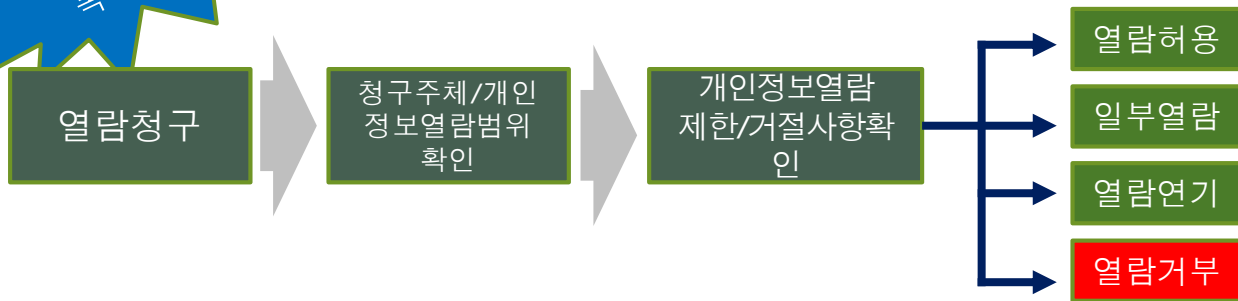
# 개인정보 유·노출 관련 공무원 징계 정도

고의·과실 비위정도 등 침해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 하고 경과실이 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 하고 경과실이 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 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 인 경우
부정이용 및 무단유 출	중징계 (파면)	중징계 (해임·강등)	중징계 (정직)	경징계 (감봉·견책)
비밀의 누설·유출	중징계 (파면)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견책)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중·경징계 (정직·감봉)	경징계 (감봉·견책)
개인정보 무단조회 · 열람 및 관리소홀 등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	경징계 (견책)
그 밖에 보안관계 법 령 위반	중징계 (파면·해임)	중징계 (강등·정직)	경징계 (감봉)	경징계 (견책)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 개인정보의 정정 등 청구

#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



열람요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

## 개인정보 열람제한 · 거절 사유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①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②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③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 to 관한 업무
  - ④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의 정정등 청구

81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개인정보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

- ① 청구주체 확인
- ② 개인정보 정정 등  
범위 확인

개인정보 정정등 제한  
사항 확인

정정등처리  
결과통지

정정등청구제  
한사항통지

정정등 요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

- **[삭제 금지]**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처리정지 요구 거절 사유]**
  -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처리가 정기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공공기관)

## 등록대상기관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 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2.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6.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

-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파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제외한 개인정보파일임.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
  - 가.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등록대상 개인정보파일

- 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라.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마.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 3.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
  - 가.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 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 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 4.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 5.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금융 업무 취급을 위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변경)  
절차

등록  
(변경)  
신청

-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을 신청함.

등록  
(변경)  
절차

등록  
(변경)  
신청

[등록신청사항]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활용

등록  
(변경)  
사항  
검토

- 등록(변경)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 한 후 행정자치부에 등록함.
- ①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부에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교육부의 확인을 받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함.
-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상위 관리기관에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상위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함.

등록  
(변경)  
절차

등록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6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함.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학교 포함) 등 전국적으로 단일한 공통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기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등록해야 함.
- 전국 단일의 공통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은 해당 중앙부처에서 등록·관리해야 함.
- 개인정보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다음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제공받는 자
7. 개인정보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8.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제4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 1. 개선권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2. 관리의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함.

## [행정자치부의 의무]

### 1. 개선권고

-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①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 ③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④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파일은  
용개선권고  
및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⑤ 기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선을 권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음.
-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2. 공개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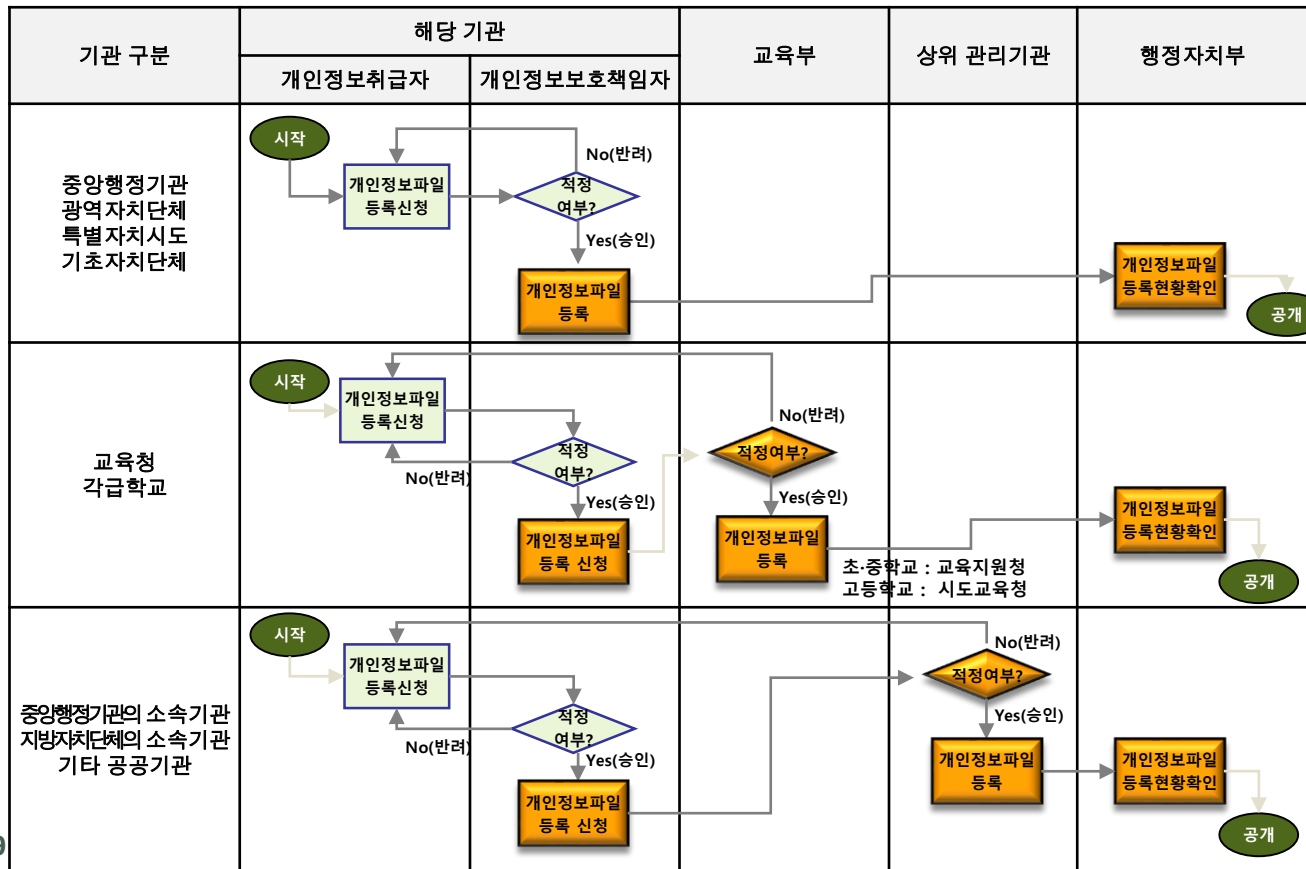
-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 행정자치부는 모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삭제 현황을 종합하여 매년 공개해야 함.
-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개인정보파일 관리대장 기록·관리

- 공공기관은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함.
-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대장」(표준 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함.



#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 절차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 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  
✓ 다만, 내부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함.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1.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함.
2.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함. 다만,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표준지침 별표 1)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음.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3.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음.

- 개인정보파일 파기 후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표준 지침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관리함.

## 등록삭제

-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에 통보하여야 함.

# 행정처분결과공표제도

2016. 10. 의료법인 해원의료재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남여주레저개발주식회사, 구로성심병원,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가천대의대부속 동인천길병원 등 7개 기업(기관)

2016. 2. (주)해태제과식품, 사단법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더베이직하우스, (주)애경유지공업, (주)파인리조트 등 5개 기업(기관)

2015. 8. (주)미래의료재단 등 1개 기관

- “행정처분결과공표제도”는 다음을 그 대상으로 함.

대 상	내 용
개선권고 (제6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 유]</b>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li>• <b>[내 용]</b>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 권고</li> <li>• <b>[의 무]</b> 권고받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성실한 이행 및 조치 결과 보고 의무</li> </ul>
시정명령 (제6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 유]</b>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i> <li>• <b>[내 용]</b>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함. → ①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②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③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li> </ul>
고발/징계권고 (제6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고 발]</b>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에 그 내용의 고발</li> <li>• <b>[징계권고]</b>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에 징계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li> <li>• <b>[의 무]</b> 권고 존중 및 그 결과 통보 의무</li> </ul>

## 대 상

## 내 용

과태료(제75조) • **[내용]**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내용 및 결과

- 행정처분결과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공표합니다.
  - ① 공표사실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행자부→공표대상자→행자부)
  - ② 공표내용 심의·의결 요청 및 회신(행자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자부)
  - ③ 홈페이지 공표(행자부)
- 행정처분의 결과는 다음의 7가지 항목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 공표합니다.

위반내용	다른 위반행위를 은폐·조작 하기 위하여 위반한 경우
위반정도	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위반기간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위반횟수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과징금,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피해범위	유출·침해 사고의 피해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피해결과	유출·침해로 재산상 손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불법적 매매 또는 건강 정보 등 민감정보의 침해로 사회적 비난이 높은 경우
시정조치	위반행위 관련 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받은 경우

# 행정처분결과공표제도



-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책임있는 자의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고발 또는 징계권고 외에 이 법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해당 개인은 물론 기업의 신뢰도 또는 신인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해당 자는 결국 퇴사를 하게 되고 기업의 매출액은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요?



- “행정처분결과공표제도” 는 2014년11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행정처분결과공표제도는 첫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당사자 및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경고적·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 둘째, 유사사례의 발생을 방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질서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 받지 않는다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 행정처분결과 2014년 이후 3차례 13개 기관(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한 바 있다.

# 법 칙

구분	주요 내용	처벌 및 벌칙
수집 · 이용	민감정보(사상·신념·정당가입·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제59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탈의실·목욕실 등 CCTV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1조)	
제공 · 위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또는 암호화조치 불이행한 자(제24조의2)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안전관리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CCTV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CCTV 설치·운영기준 위반(제25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미지정(제31조)	
	CCTV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정보주체 권익보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제34조)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거절(제35조)	
	정보주체의 정정·삭제요청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관계물품·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파기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주의사항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음.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고발을 하거나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징계권고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징계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징벌적 손해배상)
- ⑤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법정손해배상)



**감사합니다.**